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5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28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박홍배 · 조 국
조인철 · 임호선 · 서삼석
김남희 · 정일영 · 안도걸
황명선 · 임광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,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.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,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금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0조의3 신설).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채납사실의 공개)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의 세금 채납이 있는 때에는 채납자 인적사항 및 채납사실(채납액·압류·압류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사실을 말한다) 등을 관보(공보를 포함한다)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 이전에 채납자 등에 대하여 채납사실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,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.

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채납실적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체납사실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, 정보통신망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0조의3(채납사실의 공개) ①</u> <u>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</u> <u>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</u> <u>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</u> <u>존속·직계비속의 세금 체납이</u> <u>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</u> <u>및 체납사실(채납액·압류·압</u> <u>류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관련 사실을 말한다) 등을</u> <u>관보(공보를 포함한다) 및 인사</u> <u>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</u> <u>망을 통하여 매년 공개하여야</u> <u>한다. 다만, 시효의 완성으로</u> <u>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</u>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</u> <u>에 따른 공개 이전에 체납자</u> <u>등에 대하여 체납사실 공개대</u> <u>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</u> <u>회를 주어야 하며, 통지일로부터</u> <u>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</u> <u>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세청</u></p>

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주기적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
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의 국세
및 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
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
우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및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
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
야 한다.

④ 체납사실 공개대상자 통지
및 소명, 정보통신망 공개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